

더 빠르게, 더 멀리 자율주행차가 달려갑니다

-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5,224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작년 12.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km)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 이에 3.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km)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

<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도로연장 및 규모 >

구분	현행	변경
고속도로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구간 332.3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 * 경부선(판교JCT~옥천IC), 영동선(동군포IC~호법JCT), 수도권제1순환선(판교JCT~하남JCT), 중부선(하남JCT~남이JCT)	고속도로 전체 44개 노선 5,224km 및 분기점·나들목·부대시설·연결도로
일반도로	6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25.7km	19개 IC~물류시설 연결도로 143km
총합	358km	5,367km

□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기존) 60일간의 화물 적재량(톤)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 허가
(개정) ①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 ②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하므로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

-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 유상 화물운송 허가 신청예정 기업 >

구분	마스오토	라이드플렉스
차량		
운행 예정 대수	현대 파비스 5대(3월 신청 예정)	타타대우 맥센 2대(5월 신청 예정)
최대 적재량	11.5톤	25톤

* 마스오토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누적 91만km, '23.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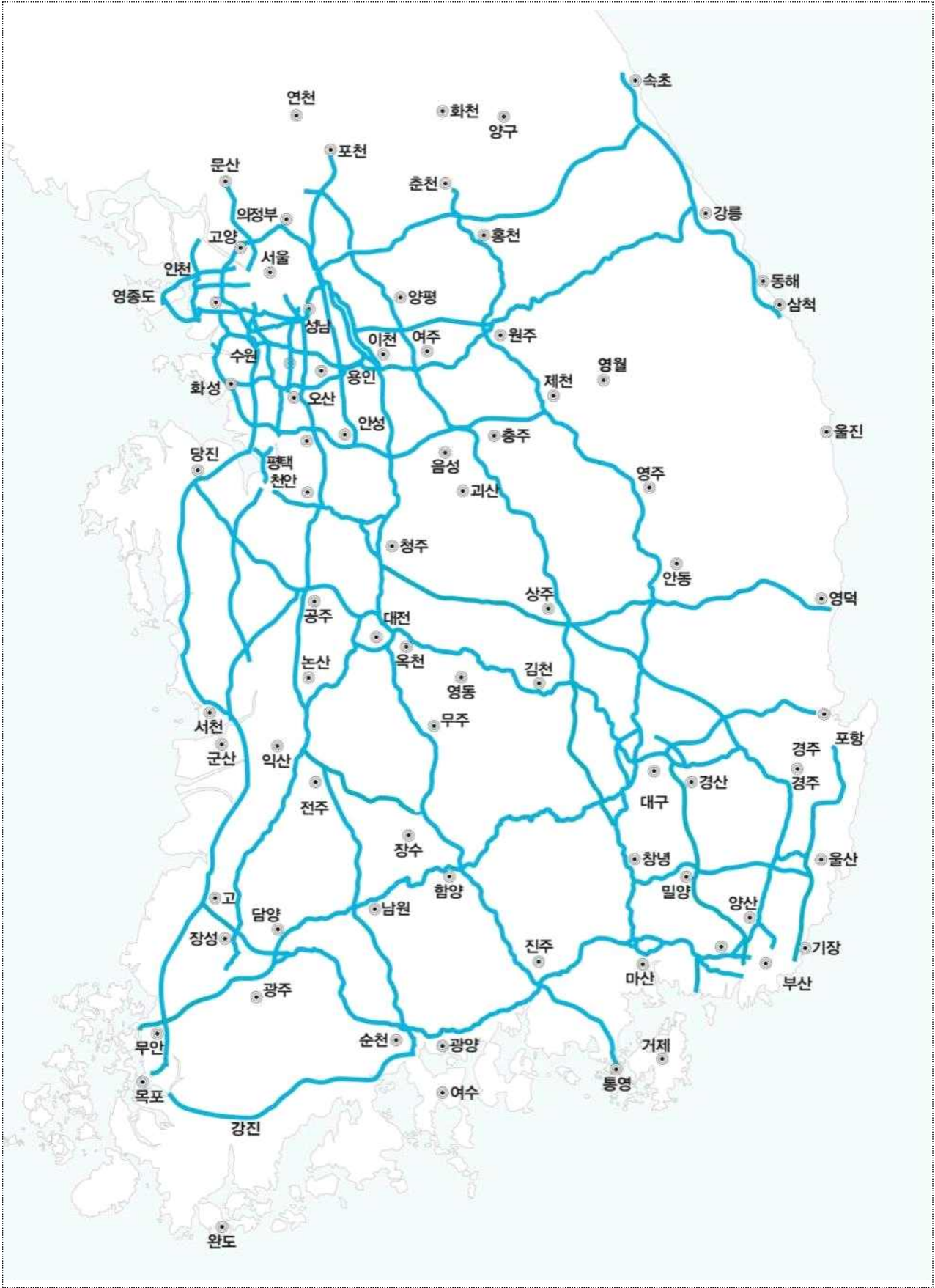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3852)
			주무관	김만호 (044-201-4147)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책임자	처 장	이희상 (054-811-2601)
		담당자	부 장	임권재 (054-811-2670)

참고 1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참고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요

- (목적)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 운영성과 평가 및 기본정책·제도 수립 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운영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구성) 민관 공동위원장 포함 총 18인(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2명)

- 정부위원(6) : 국토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교통·재정·통신 등 지구 운영과 연관된 각 부 차관급*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국토부 제2차관, 기재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중기부 차관, 경찰청장

- 민간위원(12) : 자율주행 연구·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위촉(임기 2년, '25.2~'27.2)

< 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분야	성명	주요 경력
모빌리티	하성용 (민간위원장)	(現)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한국자동차안전학회장
	여화수	(現)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New York University 겸임교수
	장정아	(現) 아주대학교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 평가위원
교통	이선하	(現) 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장
	박경아	(現)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통신	안희진	(現)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도시·지역발전	이백진	(現)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임미화	(現)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로봇	최민제	(現)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AI·정보	김유리안나	(現) 웰로(맞춤형 정책 플랫폼) 대표
	채상미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위원
법률	최수진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